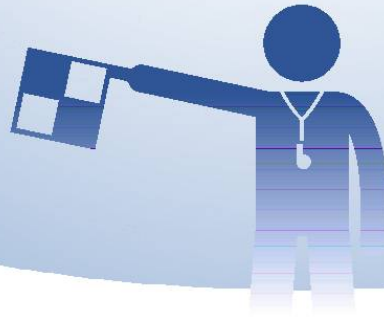


생활 속 반칙과 특권

마침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생활속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미리보기



유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많은,



청소년

투명한 학사관리와
입시제도로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청년 · 직장인

채용절차가
더 공정해지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당하지 않는,



중 · 장년

내가 낸 세금이
바르게 쓰여
기분좋은,



노년

튼튼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있는,



생활속 반칙과 특권의 **마침표[.]**가 꼭 필요합니다.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

9대 과제

1 교육부	2 국민권익위원회	3 국무조정실	4 기획재정부	5 법무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 학사비리 근절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분야 갑질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역토착 비리 근절
				
6 국세청/조세심판원	7 보건복지부	8 국토교통부	9 행정안전부	
탈세행위 근절 및 조세심판 투명성 강화	보험수급 비리 근절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안전분야 부패 근절	
				

유치원 공공성 강화

주요 성과

- ✓ 국·공립유치원 추가 확보('19년 1,000학급)
- ✓ 기본급 보조 인상(59만 → 62만원)
- ✓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 신설 (3만원)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

유치원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7년 또는 9년 이상의
교육경력

개선

9년 또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시행('20.1.1.)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도입

2018

0개소

2019

1,320개소

2020

3,978개소

목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주요 성과

- ✓ 국·공립유치원 추가 확보('19년 1,000학급)
- ✓ 기본급 보조 인상(59만 → 62만원)
- ✓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 신설 (3만원)

유아학습권 보장

유치원 폐원 시에도 유아학습권이 보장됩니다.

기존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신청 시
심사기준 없음

개선

교육감은 유치원 폐쇄 인가 시
시기의 적절성, 학부모 의견 등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고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행('19.8.6.)

대규모 신규택지에는 국공립유치원을 100% 설립하는 등
국공립 유치원 확대

취원률 2018
25.5%

2019
28.1%

2020
40%
목표



학사비리 근절

주요 성과

- ✓ 자기소개서 대필 시 입학취소
- ✓ 대입 평가기준 공개 확대
- ✓ 미성년 저자 논문 관련 사안 감사

대학 입시전형의 공정성 제고

응시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평가위원은 회피 제척됩니다.

기존

입학사정관 등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미비

개선

대학의 장에게 입학사정관
배제 의무 부과

응시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부과

고등교육법 개정 시행 ('19.10.17.)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등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대학 수

2019년
68개 대학



※ 지원 사업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평가지표 반영 ('19.3월~)

학사비리 근절

주요 성과

- ✓ 자기소개서 대필 시 입학취소
- ✓ 대입 평가기준 공개 확대
- ✓ 미성년 저자 논문 관련 사안 감사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대학입시 전형자료 부정 사용 시 입학이 취소됩니다.

기존

전형자료 허위 기재 시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개선

대학입시전형자료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 시
입학취소 의무화

고등교육법 개정 시행('19.11.19.)

학교생활기록부 맞춤형 교원연수 현황

교원
2,240명
권역별 시행 중



교육청 업무담당자
400명
100% 완료



강사
1,800명
100% 완료



관리자
600명
시행 중



학사비리 근절

주요 성과

- ✓ 자기소개서 대필 시 입학취소
- ✓ 대입 평가기준 공개 확대
- ✓ 미성년 저자 논문 관련 사안 감사

교원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사립학교 교원 비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기존

교육당국의 징계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리거나 무시
제 식구 감싸기 행태

개선

시험문제 유출 등 평가관련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위 시 파면**

사립학교법 개정 및 시행('19.10.17.)

교내 시험지 보안강화
평가관리실 CCTV 설치율

2018년
48.9%



2019년
99.37%
설치 완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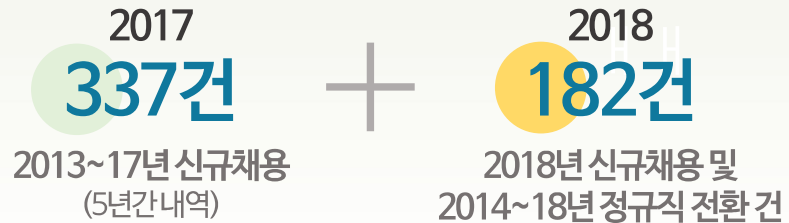
- ✓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점검
- ✓ 공정 채용문화 정착 맞춤형 홍보·관리



채용비리 적발 및 피해자 구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채용비리 적발

정부 출범 후 최초



비리 유형에 따른 채용제도 개선 권고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
구제율

99.4%

채용비리 피해자
3,317명 중 3,298명에게
채용기회 부여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주요 성과

- ✓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점검
- ✓ 공정 채용문화 정착 맞춤형 홍보 · 관리



공공 및 민간분야의 채용 공정성 강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인사조치 미흡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 시 수사감사의뢰

채용비리 행위자 명단공개,
부정합격자 인사조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18.9.28.)

민간기업 채용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청탁이 사라집니다.

민간기업 채용청탁 시
법적 제재 미흡

30인 이상 상시근로자 재직
민간기업 채용청탁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7.17.)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주요 성과

- ✓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점검
- ✓ 공정 채용문화 정착 맞춤형 홍보 · 관리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

친인척 채용 등 **깜깜이 채용**이 금지됩니다.

기존

친인척 채용 등
채용세습에 대한
사회적 비판 증대

개선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19.11월 현재 법제심사 중)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
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 답한 비율

2016년
76%



2017년
59%



2019년
51%

공공분야 갑질 근절

주요 성과

- ✓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구축·운영
- ✓ 모든 공공기관(338개) 갑질 근절 대책 시행
- ✓ 경찰청 갑질범죄 특별단속 183건 적발



법·제도 내 갑질 유발 요인 근절

갑질유발 법령을 발굴,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공직자의 갑질금지
조항 없음

개선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등
갑질금지 및 징계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및 시행('18.12월) / 공무원 징계령 개정 및 시행('19.4월)

기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 미비

개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근로자 보호방안 시행**

※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시행('19.7.17.)

기존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
폭언, 폭행 등에 무방비 노출

개선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애 발생 시
업무중단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시행('18.10.18.)

127건 발굴 → 102건 개정완료

공공분야 갑질 근절

주요 성과

- ✓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구축·운영
- ✓ 모든 공공기관(338개) 갑질 근절 대책 시행
- ✓ 경찰청 갑질범죄 특별단속 183건 적발



사회 각 분야의 갑질 인식 개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19.7월)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줄었다'는 응답비율

공공기관
49%



대기업
38%



중소기업
35%



개인사업자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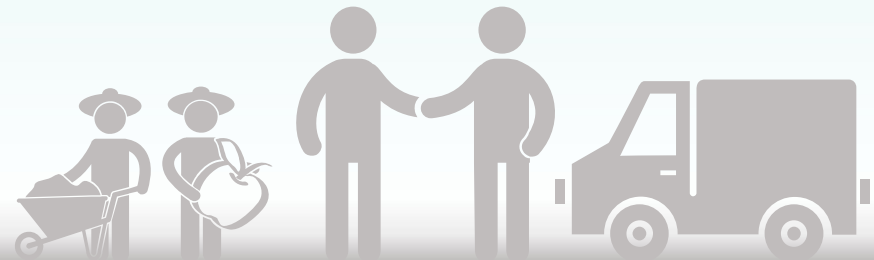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확대 및
대규모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개선율

2017
84.1%



2018
94.2%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주요 성과

- ✓ '19.1월~7월 총 1,854억 적발(잠정치), 이 중 647억 환수결정
나머지도 추가조사후 환수결정 추진
- ✓ e-나라도움의 자격검증,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 마련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강화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관리체계가 강화** 됩니다.

기존

국고보조금 등
일부 공공재정에 한해
환수 및 제재부과

개선

대가없이 지급되는
모든 공공재정에 대해
금지 및 환수, 제재부과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및 시행('20.1.1.)

관련지침 개정 및 집중 점검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결정 금액

2018 387억원 → 2019 647억원
(1~7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주요 성과

- ✓ '19.1월~7월 총
1,854억 적발(잠정치),
이 중 647억 환수결정
나머지도 추가조사후
환수결정 추진
- ✓ e-나라도움의
자격검증,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 마련



부정수급 신고·관리·감독 강화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 되었습니다.

기존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개선

권익위 외 기관에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및 시행('19.10.17.)

부정수급 조사 및 관리감독 강화 관리 전담조직 설치



시·도별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
17개 시·도
68명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
1단4팀
18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주요성과

- ✓ '19.1월~7월 총
1,854억 적발(잠정치),
이 중 647억 환수결정
나머지도 추가조사후
환수결정 추진
- ✓ e-나라도움의
자격검증,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 마련



주민참여 자율감시체계 구축

지방예산 전 과정을 주민이 감시하고 참여합니다.

기존

주민 참여는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한정

개선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으로 확대

지방재정법 개정 및 시행(*18.3.27.)

주민이 직접 예산낭비 모니터링
 시도별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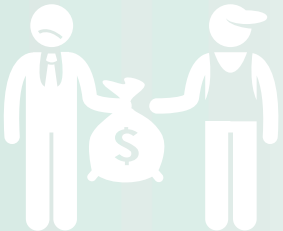
17개 시·도
906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시·도 조례 제·개정
2018.12월

지역토착 비리 근절

주요 성과

- ✓ 브로커 및 토착세력의
이권 취약 부분
모니터링
- ✓ 범죄수익 환수강화
- ✓ 조달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



지역 토착비리 엄정대응

2019

지역실정 맞춤형 수사 |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등

연합뉴스

2019-06-10

고질적 채용비리...부산항운노조 등 31명 무더기 기소

4개월간 부산항운노조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검찰이 신항 전환배치, 노조 가입·승진, 일용직 공급 등에서 구조적인 채용비리를 확인해 전·현직 노조 간부 등 수십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에도 검찰 수사로 40여명이 구속기소 됐으나 취업·승진비리는



2019

브로커 등 지역토착세력 단속 | 화순군 관급공사 지역토착 브로커 비리 등 7건

연합뉴스

2019-01-31

'비리 온상된 공공 조형물'...검찰, 강원 조형물 비리 9명 기소

'담당 공무원 상대 금품 로비·내부 정보 취득→평소 관리하던 대학교수로 심사위원 구성→심사위원 상대로 로비해 작품 당선→이익금 분배'

강원도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 조형물과 관련해



6-1

탈세행위 근절

주요 성과

- ✓ 친족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 금융조회대상 범위 확대
- ✓ 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등의 중점검증
- ✓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거짓제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 ✓ 조사종결 전 과세적법성에 대한 검증 강화



고액체납자의 고질적 체납처분 회피행위 차단

고액체납자 재산에 대한 금융조회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체납자 본인에 한해
금융조회 실시

개선

금융조회 대상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

금융실명법 개정 및 시행 ('20.1.1.)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 고액체납자의 고질적 탈세 차단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부과
5종 추가



골프연습장

예술품 및 골동품

악기 등

전국 동시 세무조사
5차례



유튜버

연예인

불법대부업자 등

6-1

탈세행위 근절

주요성과

- ✓ 친족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 금융조회대상 범위 확대
- ✓ 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등의 중점검증
- ✓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거짓제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 ✓ 조사종결 전 과세적법성에 대한 검증 강화



탈세행위 제제강화와 세무조사 품질 제고

국제거래 관련 자료 미제출·거짓제출시 제재 강화

기존

국제거래 관련 자료
미제출·거짓제출시
1억원 한도로 과태료 부과

개선

시정명령 불이행 시
**2억원을 한도로
과태료 추가 부과**
(도입 추진중)

국제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8.29.)

조사종결 전 과세적법성에 대한 검증 강화 불복환급 건 수 감소

2016 8,356건 → 2016 7,917건 → 2018 7,712건



6-2

조세심판 투명성 강화

주요 성과

- ✓ 심판진행상황
전면공개 전산시스템
구축('19.1월)
- ✓ 동등한 권리구제 기회
보장을 위한
표준처리절차
시행('18.10월)
- ✓ 내부검토기간,
심리재개 및 장기미결
사건 감축
- ✓ 전자심판제도
도입·시행('19.7월)



심판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심판절차의 투명성 강화
심판 단계별 진행정보 전부공개(23개 항목, 홈페이지)

시행 이후
총 78,133개
2019.3월~10월



처리건수당
평균 9.8개
5,356건 처리 / 52,560건 공개

심판청구 → 사건배정 → 사건조사 → 서면공방 → 심판관회의 → 내부검토 → 발송

동등한 권리구제기회 보장을 위한 표준처리절차를 시행합니다.

기존

서면주장·반박기회가
제한적

개선

서면주장·반박기회를
**모든 당사자에게
최소 3차례 부여**
최대 180일 이내에 사건처리

표준처리절차 시행('18.10월)

6-2

조세심판 투명성 강화

주요 성과

- ✓ 심판진행상황
전면공개 전산시스템
구축('19.1월)
- ✓ 동등한 권리구제 기회
보장을 위한
표준처리절차
시행('18.10월)
- ✓ 내부검토기간,
심리재개 및 장기미결
사건 감축
- ✓ 전자심판제도
도입·시행('19.7월)



심판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내부검토기간 단축

심판부의의결이 기존
선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절차

2017
13일

2018
9일

2019.10월
8일



심리재개 최소화

내부검토 결과 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요청하는 것

2016
3.3%

2018
2.8%

2019.10월
1.3%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열람을 확대합니다.

당사자 신청 시에만
사건조사서 열람 가능



일정금액 이상 사건의 경우
신청과 상관없이
당사자에게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사전열람제도 확대 시행 예정('20.2월)

보험수급비리 근절

주요 성과

- ✓ 사무장 처벌강화 및 조사거부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 ✓ 사무장병원 임원에 대한 환수금 연대책임 확대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및 제재 강화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및 법령 개정

기존

의료법 위반
조사거부의 제재조치 미흡

개선

징역·벌금형 및
업무정지 15일 → 6개월로 강화

※ 의료법 개정 및 시행('19.11월) /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19.8월 시행)

기존

사무장병원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체계 미흡

개선

몰수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9.4.23.)

기존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부당이득 시 제재조치 미흡

개선

1억이상 징수금을 1년 넘게 미납시
인적사항 등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19.10.31)

보험수급비리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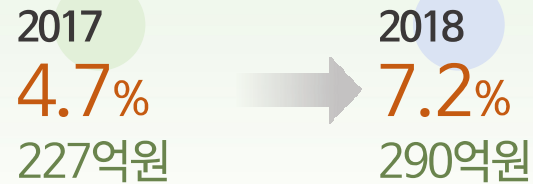
주요 성과

- ✓ 사무장 처벌강화 및 조사거부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 ✓ 사무장병원 임원에 대한 환수금 연대책임 확대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사무장 연대책임 확대 및 특별징수팀 운영 등
부당이득 환수(징수율)



건보 고액체납자
징수팀 운영
(19.1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행정조사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주요 성과

- ✓ 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19.12월 예정)
- ✓ 총 3차에 걸쳐 서울시
내 7개 구역 현장점검
- ✓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마련·배포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확보

시공사 선정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개선

시공사 선정 취소 또는
과징금(공사비 20%) 부과
+
2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

도시정비법 개정 및 시행(‘18.10.23.)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비리 적발
조합운영실태 관련 합동점검 (국토부·서울시·감정원)

총
307건
적발

1차(2016) 124건 + 2차(2017) 76건 + 3차(2018) 107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시행



재건축· 재개발 비리 근절

주요 성과

- ✓ 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19.12월 예정)
- ✓ 총 3차에 걸쳐 서울시
내 7개 구역 현장점검
- ✓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마련·배포



정비사업 관련 비리 퇴출

공사비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이 방지됩니다.

기존

시공사 선정 후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검증
절차 미흡

개선

10% 이상 공사비 증액 시 또는
1/5 이상 조합원 요청 시
공사비 검증 의무화

도시정비법 개정 및 시행(‘19.10.24.)

반복적인 수급비리 업체는 퇴출됩니다.

기존

정비사업 수급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에도
지속적인 비리 발생

개선

3회 이상
반복적인 수급비리 업체는
정비사업에서 영구 배제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제출(‘19.7.30.)

안전분야 부패 근절

주요 성과

-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총 74개 기관)
- ✓ 중점과제 및 시·도 합동감찰 이행
- ✓ 안전부패 신고 활성화 (안전보안관 활동 등)

안전사고를 반부패 관점으로 예방

중앙부처와 시·도가 안전감시 역량 결집
안전분야감사·감찰 처분건수(기관합계)



2019

건축자재 품질관리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감찰

건설경제

2019-02-27

불량 건축자재, 생산·성능 시험·시공·관리감독까지 '총체적 부실'

화재 피해를 키우는 불량 건축자재는 자재의 생산 과정뿐 아니라 성능 시험과 시공, 관리 감독 등 전 과정에 걸쳐 만연해 있다.

건축자재는 품질별로 요구되는 기준은 다르지만 화재 시 발열 시간 동안 불에 견디는 데 필요한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자재의 안전 인 유독 불량이 거론되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다. 대형 화재 사고 이후 원인으로 지목된 이 같은 성능 기준은 꾸준히 강화돼 왔지만, 실제 건축현장의 개선은 미미한 것이다.

총체적 부실의 시작은 생산 단계다. 방화문이 대표적이다. 방화문은 불이 나면

기준 마달 방화문 설치 일상화 제품 인증 후 바뀌치기도 만연

준공검사, 마감 끝난 후에 나와 불량하게 사용해도 확인 못해

이 나면 대피공간 안으로 순식간에 불길 이 번진다.

건축 현장이 부실한 시공도 화재 피해를 키우는 잠재적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 적발된 A업체는 준공 후에

기준 마달 건축자재 호 불량 시공 사례



내화충전재를 불량하게 시공한 현장.



기준 마달인 단열재를 시공한 현장.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시공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뒤, 이와 다른 제품으로 나뉘는 것

단열재 위에 내화페인트를 칠한 제품은

난연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건축법상 사 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 지체기관인 한국

에는 47건에 달한다.

이 같은 불량 건축자재와 부실한 시공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 역시 허술하다.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 전기 등 상주 관리자를 배치해 시공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기술자격증을 대 여해 무자격자가 근무하는 것이 대표적이 다. 자격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시간 내에 계엄업무를 보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재난구조나 대 화재연구소는 시공 후 최종 대강 공사를 끝낸 뒤에 관련 감사를 해야 때문에 불합



주요 향후계획 | 2020년

교육부

1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
-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전면 개편



국민권익위원회

2

- 2019년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
-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무조정실

3

- 공공분야갑질
근절 실적 점검
- 갑질 근절 사회적
인식 개선 지속
홍보



기획재정부

4

- 특별사법경찰
확대 추진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후속조치



법무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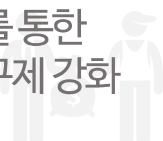
-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단속 강화
- 치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한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국세청/조세심판원

6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규제방안 마련
- 심리기회·
의견진술기회
확대를 통한
권리구제 강화



보건복지부

7

- 사무장병원 근절
및 환수율 강화
관련 법령 개정
- 지자체 등과
행정조사·수사
공조



국토교통부

8

- 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합동 조합점검
확대



행정안전부

9

- 지역협의회
구성 완료
- 제2차 안전감찰
국민제안 공모
실시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